

## 러시아 대외경제 전략의 진화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상준

국민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대외경제 협력이 러시아 역사상 오늘날처럼 중요한 적은 없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다. 대러 제재는 러시아 자본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천연자원의 서방 수출을 크게 줄여줄 것이고, 러시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부품 등 서방의 이중용도 상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경제 협력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자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의 서방 의존도를 줄이고 지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로의 무역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원국을 늘리면서 대외 경제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유라시아 근외 지역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러·우 전쟁 종전 이후 러시아의 이런 행보가 과거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역사에서 대외경제 협력이 어떻게 기능하고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제정 러시아는 대외무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출간된 이후 서구는 국부 증진을 위해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세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1860년 영국과 프랑스 간 체결됐다. 무역에 필요한 국제결제에 위해

1816년 영국을 시작으로, 1871년 독일, 1875년 프랑스가 금본위제(Gold Standards)를 채택했다. 하지만 제정 러시아는 1897년에 이르러서야 국제 금본위제를 도입했다. 차르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은 그다지 권장되지 않았다. 절대왕정 시대 자유무역은 신흥 세력을 발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에 불순 사상이었고, 왕권을 약화할 수 있었기에 자유무역을 권장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불온서적으로 분류됐다. 절대왕정 체제가 자유무역을 꺼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르 체제가 대외무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러시아는 대외무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출처: library.fa.ru)

니콜라이 2세 시기 재정부 장관 세르게이 비테는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며 근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비테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이 러시아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세력은 본토와 떨어진 공간을 식민 지배하면서 바다를 경유하는 원거리 무역이 발생했고 자연스럽게 국제분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는 대륙으로 영토를 계속 확장하면서 국토가 연속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국내 교역의 지리적 범위를 넓히면서 영토 지배의 완전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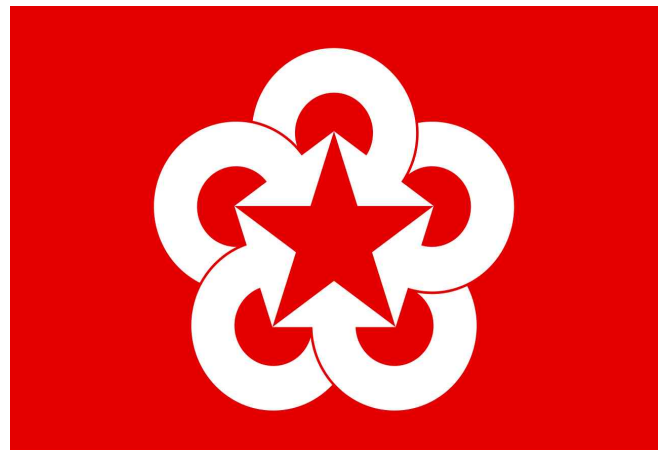
그리고 서구 문물을 수입하기 위해 국제무역을 했지만, 그 규모는 다른 제국과 비교하여 적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영국이 지배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항하는 독일, 미국 등 신흥 국가가 부상하면서 경제적 갈등이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정 러시아 역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외경제 협력은 축소됐다. 계획경제와 자급자족 체제를 선호하게 되면서 대외무역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1944년 전후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드는 브레튼우즈에 승전국으로서 초청받으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44개국이 브레튼우즈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승전국은 미국과 소련이었다. 미국은 소련을 혼자 상대하기에 버거울 때 영국을 끌어들이 3자 회의 형태로 만들어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활용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에서 자유무역과 이를 위한 국제통화 질서를 만드는 데 미국은 자국 입장을 관철하면서 영국마저 떠돌았다. 당시 영국은 케인스가 개입한 국제 청산동맹(ICU)을 제안했는데,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서 주요 국가의 화폐를 고정환율에 의해 달러와 태환하도록 하는 화이트 안(案)을 지지했고, 이를 전후 국제통화체제의 핵심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미국은 브레튼우즈체제에 의해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소련 지분을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12억 달러의 쿼터를 배정했다. 소련은 계획경제 특성상 대외무역 비중이 작아 루블화 환율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으니, 루블 환율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금으로 달러를 재매수해야 하는 의무에서 기존의 금이 아닌 새

롭게 생산한 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도 전개했다. 이는 러시아가 자유무역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걸었던 요구 조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브레튼우즈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과 서방은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GATT)을 체결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을 설립하면서 브레튼우즈체제를 출범시켰다.

반면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과 더불어 경제상호원조회의(CMEA) 체제를 형성했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주의 진영 내 무역과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기능한 CMEA는 개념적으로 케인스가 주장한 국제 청산동맹에 가까웠다. 거칠게 정의하면 국제 청산동맹은 매번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만일 서방의 국제 통화 체제가 국제 청산동맹을 채택했다면, 오늘날 국제 경제에서 발생하는 무역 수지 흑자 국가의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반면 무역 수지 적자 국가의 적자가 계속 커지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CMEA가 국제결제 준비자산으로 채택한 이전 가능한 루블(Transferable Ruble)은 양자가 아닌 다자간 금융결제로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는 계획경제의 특성이 반영되어 이전 가능한 루블은 장부상 루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경제상호원조회의(CMEA) 상징기 (출처: 위키피디아)

계획경제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다. 계획경제는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데, 타국과 국제분업에 따른 대외무역을 통제할 수 없었기에 무역



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수입은 물자 수급 계획으로 조달할 수 없었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수출은 수입품 결제에 필요한 국제지불자산을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과였다. 또한, 자본주의 진영과도 무역했는데 기계 종류와 식량 등을 수입하기 위해 에너지를 수출하고 경화(Hard Currency)를 획득하는 소극적인 무역 구도는 소련 내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은 자본주의 국가 간 무역보다 긴장감이 더 떨어졌다.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분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경제적 효익을 늘리는 것에 관심을 덜 두게 되었다. 이는 소련 시기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대외경제 비중은 턱없이 작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8년 소련 국민총생산(GNP)에서 수출은 1.6%, 해외직접투자(FDI)는 0.1%에 불과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와 소련이 대외 여건으로부터 경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는 체제를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제정 러시아의 대외무역은 곡물 수출에 집중됐다. 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무역이 크게 변동됐고 1870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곡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러시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소련 시기에도 발생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세계가 고물가 경기 침체(Stagflation)라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유가 상승 덕분에 소련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1979년 개봉한 소련의 블록버스터 영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당시 소련의 풍요로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유가, 환율, 물가의 3저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이 호황을 누렸던 것과 달리 소련은 유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외채 부담이 늘어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년), 아르메니아 대지진(1988년),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89년) 등으로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소련은 결국 해체됐다.

이고리 가이다르는 <제국의 몰락>이라는 저서를 통해 소련 몰락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sup>2)</sup> 가이다르의 저서는 러시아 경제 성장과 쇠퇴의 원인이 대외 경제 변동성에 원인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고 발간 당시 이 저서는 러시아 오피니언 리더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푸틴 역시 러시아 경제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잘 짐작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집권 초기 국부펀드를 창설한 것은 식량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 대침체를 뒤로 하고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했다. 가장 큰 성장 요인은 자원 가격 상승과 대외무역이 늘어난 것이었다. 덧붙여 러시아 정부는 연방 재정주의 정비, 외환 관리 개선, 러시아 자본시장 정상화 및 발전 등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대외경제가 러시아 경제의 자원의존도가 높아지게 했다고 비판받지만, 대외무역과 외국자본 유입이 러시아 경제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했다. 덕분에 자본축적이 가능해졌고 사회경제 기반을 개선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할 수 있었다. 역사를 통틀어 대외경제 협력이 경제를 부유하게 한 첫 번째 역사적 경험 덕분에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2012년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출처: er.ru)

그러나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2012년 미국은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죽음에 연루된 러시아 공직자 등 개인 및 관련 법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마그니츠키 법의 지배 책임법’을 제정하고 54명의 러시아 국적 개인과 1개 법인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기점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전격 확대했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더불어 러시



아에 대한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다. 이후 유럽연합(EU)은 현재까지 16차례 제재 패키지를 쏟아냈으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퇴임 직전이었던 2025년 1월 15일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

2022년 제재가 시작되면서 국제화된 러시아 경제는 위축되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응은 과거와 사뭇 달랐다. 첫째, 먼저 러시아는 할인된 가격으로 에너지 수출을 아태 지역으로 무역 전환하면서 대외무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본축적도 가능하게 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 가격은 가격 상한제에도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수록 자국의 인플레이션만 커지는 역설적 상황을 겪고 있다. 둘째,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러·우 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과거 냉전 시기 비동맹 G77과 달리, 지난 30여 년간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는 대폭 성장했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다.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구소련 국가와의 협력에 치중했던 대외경제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인도양으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를 통해 지리적 범위를 글로벌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러·우 전쟁 종전 협상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아직은 종전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종전과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최근 것부터 역순으로 해제할 것이며 금융 제재도 해제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외경제 협력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협력 구도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질서가 일극보다는 다극 체제일 경우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대외경제 협력에 소극적인 구조를 만들었지만, 대외경제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경제가 어려웠고 추락한 경험도 했다. 그리고 체제 전환 초기 무방항성, 무지항성 대외경제 개방 역시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러·우 전쟁 종전 이후 러시아 대외경제 협력이 한층 업고

레이드 형태로 발전했는지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극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북극 개발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무렵이었던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시작했다. 북극항로가 국제 운송 회랑으로 쉽게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이전 세기 TSR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 1916년 완공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지구촌에서 가장 긴 철도이며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는 점에서 국제 운송 회랑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지만, 철의 장막에 의한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전역을 통합하는 것 이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러시아 정부가 역사적 경험의 교훈으로부터 북극 개발에 있어 국제 협력에 더 개방적인 태도가 준비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16년 완공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지구촌에서 가장 긴 철도이다 (출처: 리아노보스티)

한국은 국제경제 질서의 환경적 여건에 가장 잘 대응하면서 대외경제 협력을 전개해 왔다. 냉전 시기 체제 경쟁에서는 대외무역을 통해 산업화를 이뤘고, 탈냉전 시기 대외경제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그야말로 전 세계로 확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역시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 트럼프 2.0 시대 국제무대에서 강대국 정치가 복원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전략적 의도 파악,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복원, 한층 친밀해진 북·러 관계 대응, 경제적 지위가 계속 상승하는 글로벌 사우스 전략 설정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국제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차분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좌우 이념으로 나누어 재 단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침공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심리적으로 동조하면서 국제질서의 미세한 변화 흐름을 읽는 일을 게을 리했다. 선진국으로서 개도국 시절보다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선진국이 되기까지 유연 하고 적극적인 대외경제 협력을 모범적으로 전개해 왔던 우 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자 다소 규범적이고 경직된 자세를 견 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시작으로 미·중 패권 경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이고 미·러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외교와 대외경제 협력도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대외경제 협력도 진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존재한다. 한 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은 국제질서 변화에도 한국의 유용 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이 다시 한국 경제를 도약 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이런 노력을 대러 정책에서도 찾아야 할 것이다. 

- 1) Sidney Harcave. *Count Sergei Witte and the Twilight of Imperial Russia. A Biography.* Armonk, N.Y./London: M. E. Sharpe, 1990.
- 2) Yegor Gaidar. *Collapse of an Empire: Lessons for Modern Russia.* Washingto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First Edition, 2007.

